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학교 석좌교수

6·25 이전의 가장 큰 전쟁은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었다. 조선 8도의 모든 국토와 인민이 왜놈들의 총칼에 도륙되었던 세기의 비극이자 민족의 가장 큰 수적이었다. 전국의 곳곳에서 관군은 패퇴를 거듭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의병의 봉기는 그레도 나라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했던 장렬한 투쟁이었다.

임진왜란의 의병을 말하자면 누가 뭐라 해도 광주의 고씨 3부자를 들지 않을 수 없으니, 아버지 충렬(忠烈)공 고경명(高敬命)에 두 아들 효열(孝烈)공 고종후(高從厚), 의열(義烈)공 고인후(高仁厚)였다. 이들 3부자는 왜란 이전에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천하에 이름을 날리던 집안인데, 고경명은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시인으로도 나라를 울린 문인이었다. 두 아들 또한 문과 급제로 미래가 보장된 혁혁한 인물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녹천(鹿川) 고광순(高光洵)의 의혼

은 김전일 장군 등과 연락하여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전북의 금산까지 추격하였으나 금산전투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의열공 인후 또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는 불행에 맞았다. 효열공은 겨우 목숨을 건져 진주성까지 달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복수장이 되어 끝내는 또 진주의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하는 충신이 되었다. 의열공 고인후의 11대 사손(祀孫)에 녹천 고광순(1848~1907)이 있으니, 선조들의 의혼을 이어받아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장이 되어 전라도 일대에서 싸웠다. 담양 창평 출신인 고광순은 1907년 구례의 연곡사(燕谷寺) 전투에서 끝내 왜놈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라에 올리는 상소문에서 녹천은 이렇게 말한다. “총렬 고경명, 효열 고종후, 의열공 인후 3부자는 임진왜란에 순절(殉節)하여 세상에서는 충효고(忠孝高家)라고 일컫습니다.” 세상에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후손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녹천은 명가의 후예로 젊어서부터 유학에 밝아 과거에도 응했으나,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과거에도 합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벼슬은 하지 않고 완전히 학자의 길을 걸었던 순수한 선비였다. 을미(乙未)년의 민비 시해 사건

이후 송사 기우만(奇宇萬)·성제 기삼연(奇參衍) 등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을사년 이후에는 면암 최익현(崔益鉉)의 의병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모두 성공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의병대장의 깃발을 내걸고 구례까지 추격하다가 끝내는 목숨을 바치고 말았으니,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의 한(恨)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 특기할 일이 하나 있다. 그때 전투에 임하던 녹천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태극기에는 글자 세 자 ‘불원복’(不遠復)이라고 쓰여 있었다. ‘멀지 않아 국권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였다. 전쟁에 이기면 왜놈을 몰라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여겼으니, 그런 애국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지금도 그 태극기가 녹천의 유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국보급의 귀중한 유물임에 분명하다.

매천 황헌(黃玿)은 한말의 지사(志士)이자 탁월한 시인이었다. 선비의 나약함을 벗지 못해 의병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지식인의 도로로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목숨을 잇고 있겠느냐면서 망국의 소식에 아련을 마시고 자결한 의인이다. 그때 자기가 살던 구례에서 가까운 연곡사에서 녹천이 전사했다는 소식

을 듣고 가매장한 녹천의 묘소를 찾아가 시 한 수를 읊었으니,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슬픔에 젖게 한다.

“연곡사의 봉우리 봉우리 울창한 숲이 로다/ 한평생 나라 위해 싸우더니 목숨까지 바쳤네/ 싸우던 말들은 흩어져 눈동령에 누워 있고/ 까마귀 떼들만 나무그늘에 남아와 있네/ 나 같은 글쟁이 선비 어디에 써먹지/ 이름 높은 가문의 명성따를 길 잃어라/ 혼자서 서풍 향해 뜨거운 눈물 흘리노니/ 새로운 무덤 국화옆에 우복 솟았네”

의병장으로 싸우다 전사한 녹천의 죽음에 죽지 못한 나약한 선비의 아픈 마음을 읊었는데, 이런 시를 짓고 난 3년 뒤인 1910년 경술합방에 비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매천은 또 자결을 감행하고 말았다. 녹천의 죽음은 매천의 죽음을 불러온 의혼(義魂)이 되고 만 것이었다.

1592년의 고경명의 의혼, 1907년 고광순의 의혼, 3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런 의혼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고 이순신이 말했을 것이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기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윌턴 L. 루트는 ‘자본과 공포(Capital and Collusion)’라는 책에서, 경제 성장은 그 나라의 정치와 제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상태이다. 실업률, 설비 투자, 제조업 가동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연일 최악을 경신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 심리 지수까지 동반 급락해 실물과 심리 지표 모두 최악인 상황이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는 지평선 너머까지 운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시장은 권력의 선의(善意)만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데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들 정책의 속도와 시장의 수용 능력이 다. 취지는 좋은데도 시장의 반응과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

무엇 때문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명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비대한 청와대가 총리와 내각의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청와대 비서진들이 경제 현실과 시장을 무시한 채 경제부총리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니,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책임 정치와 책임 정부는 사라지고,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정부’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시, 경제부총리에게 정책 전반을 일임해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어떤 경제 정책이라도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면밀하고 정교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고려가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순환 생태계 작동이 중단되었다.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시장 침체라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위기에 처해있다.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한 데서 비롯된 시장의 역습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패를 숨겨서 인정하

고 정책 기조를 한사라도 빨리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자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이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1년 동안의 무모한 실험 결과 실패로 판명 났다면, 조속히 정책 전환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과 재벌 개혁 등 4대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규제 개혁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변화는 감지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다. 보다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동 시장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진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진보 정부인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졌고, 프랑스가 노동 개혁에 성공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당 사회당에 몸담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강요한다면 그런 개혁의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고, 사용자의 해고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혁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성공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조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한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데에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금의 소득양극화와 경제 위기에 재벌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재벌의 과실은 사유화하는 반면 손실은 사회화하기에 급급하며, 갑질과 특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선순환을 지켜내는 방법이고,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정작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다. 개혁 과제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이들 4대 개혁의 골든타임은 작년이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실패타임이다. 이마저도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성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이끌어내 세계 유수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조금의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한다.

社說

사설보다 비싼 송정역 주차료 당장 내려라

호남의 대표 관문인 광주 송정역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데다 인근 사설 주차장보다 갑절이나 비싼 주차 요금으로 이용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증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는 외면한 채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송정역 1일 평균 이용객은 2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5000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1만4000명, 2017년 1만9000명으로 3년간 네 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16년 12월 개통한 SRT 이용객은 하루 5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표적인 편의 시설인 주차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주차장 두 곳에는 고작 610대만 주차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차 요금은 인근 사설 주차장에 비해 두 배나 비싸다. 송정역

의 주차 요금은 기본 30분 1000원에 추가 10분당 400원, 하루 주차 땀 1만 원이다. 반면 송정역에서 1km 떨어진 한 사설 주차장에서는 하루 5000원을 받으며 주차장에서 역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설 주차장에서 도로 곳곳에 붙여 놓은 ‘1일 주차 5000원’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송정역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용객들이 주차 요원과 요금 시비를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주차 공간 확충은 뒷전인 채 이용객들에게 사설 주차장에 비하면 두 배나 되는, 바가지에 가까운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당장 요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 중인 주차타워 건립을 서둘러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호남권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미래 도시계획 통합 관리 절실하다

광주시 미래 도시 계획에 문제가 많다 지적이다. 본보 기자가 심층 취재한 결과 광주시의 미래 도시 계획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가 지나치게 장기간을 예측하고 실현 없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수십억 원의 현세를 투입하면서도 담당부서 직원의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도시공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계획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에 어울리게끔 계획 수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같은 도시공간인데도 미래 계획은 각 실·과 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각 실

·과에서 개별법에 근거해 각 분야별 계획을 지적이다. 본보 기자가 심층 취재한 결과 광주시의 미래 도시 계획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가 지나치게 장기간을 예측하고 실현 없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수십억 원의 현세를 투입하면서도 담당부서 직원의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도시공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계획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에 어울리게끔 계획 수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같은 도시공간인데도 미래 계획은 각 실·과 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각 실

·과에서 개별법에 근거해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각각 용역업체에게 맡기고 있어 따로 놓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입안한 ‘2030 광주도시경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사문화’될 실정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 미래 계획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하향식 계획시스템의 문제다. 지자체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상향식으로 바꾸되 장기 계획은 되도록 자체화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 공간과 관련된 미래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교통건설국 등이 맡고 있으나 그 외에 복지건강국이나 문화관광체육실 등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기 수립 주체가 달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각각의 계획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無等鼓

‘미투(Me too)’는 남녀 간 왜곡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됐으며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라는 점에서, 갑이 을을 유린하는 ‘갑질’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존여비’라는 비틀어진 유교적 가치관과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조금의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한다.

신화에서 농신(農神)으로 추앙받는 자청비도 살아서는 ‘미투’의 희생자였다. 사랑하는 남편 문 도령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자청비를 따라나선 하인 정수남은 ‘돌봐 준다’는 명목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 한 번 잡게 해 달라, 입이나 맞추게 해 달라, 허리나 안아보게 해 달라’며 자청비를 괴롭힌다.

하지만 우리 신화 속에서 바리데기든 자청비든 어느 누구도 정수남과 정수남의 ‘비열한’ 행위를 외부에 고발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처럼, 여에게 버림받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기를 버린’ 죄로 천벌을 받게 되는데, 바리데기는 그런 아버지를 구해 낼 약물을 구하기 위해 저승인 서천서역국으로 향한다. 천 신만고 끝에 서천서역국 동대산에 다다른 바리데기는 산지기인 동수자를 만난다. 눈은 등잔 같고, 얼굴은 박박 얇은 데다 절름발이에 곰배발이인 동수자는 약물을 구해 주는 대가로 ‘결혼해서 삼년을 같이 살되 아들 삼형제를 낳아줄 것’을 요구한다. ‘효도’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의 잣대로 재어 보면 동수자의 행위는 ‘미투’의 대상 그 자체일지 모른다.

신화 속의 미투

남성의 갑질을 견뎌 냈다. 자청비도 쓰러진 나루 꼬챙이로 정수남의 귀를 찔러 죽였지만 나중엔 뱀살이꽃과 혼살이꽃을 이용해 정수남을 살려 낸다. 문제는 이처럼 비열하진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권력의 갑질’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문화 유산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산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꿈꾸는 2040



김경은
위원연구원 공동대표·변호사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 사태가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한 문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건 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까지 재판 거래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시나리오로 심리를 열지 않은 방안, 두 번째로 재판권은 인정하지만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 세 번째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

사법 농단 사태와 사법 개혁에 대한 여망

이 있지만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결국 대법원은 재판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제 1안을 선택하였고, 2년 6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할머니들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 사법 정책실 문건에 의하면 법관의 해의 파견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여 강제 징용 재판이 열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행을 하였다. 외교부 의견의 국외 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재판을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5년 동안 심리 불속행으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법원 설치가 숙원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 개입 또는 재판 거래를 한 정황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상고 법원 설치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최종심이 아닌 각급 법원인 상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면 이 자체로 위헌이 될 뿐 아니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 관리를 침해한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국회 동의 없이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판사를 직접 임명을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된다. 이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하고, 사법 농단을 통해 신뢰를 잃은 사태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마저 줄줄이 기각되자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법부 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먼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셀프 재판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판단을 위한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시민 사회의 추천을 받은 재판부가 구성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의무화한 특별 재판부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 식구 바꾸기 의혹

을 해소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법원 행정처 및 대법원장의 제왕적 기능을 없애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 행정 총괄 업무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 행정 회의에 맡기는 것도 국민적 의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중립에 대한 법관들의 의지가 아닐까 싶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고, 사법 농단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바로 세워질지 간절히 마음으로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국문·신경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